

한라시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근 제주에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주최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한국동서발전(주)는 150MW 규모 LNG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마지막 단계인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제주도 탄소중립 실현과 계획 타당성 논란이 일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이다.

동서발전과 제주도는 LNG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따라 LNG발전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없는 LNG발전소 계획 재검토해야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바이오 중유 발전기의 설비수명이 도래해 신규 필수운전발전기(Must-Run)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발전 원료를 LNG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NG발전 중심의 대안도 부적절하다.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외치는 제주도가 최소 30년은 가동해야 하는 화석연료 LNG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브릿지 전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첫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최적의 대안은 LNG발전이 아니라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 오히려 LNG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을 초래하며 제주지

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어렵게 할 뿐이다. 특히 신규 LNG발전으로 기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둘째, 노후 발전기 폐쇄로 발전용량 부족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전기가 남아 출력제어가 이뤄지는 상황이고, 이미 육지와 연결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해저 연계선이 3개나 있다. 더욱이 최근 동서발전은 조천읍 북촌리에 140MWh 규모의 국내 최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따라서 노후 발전기 폐쇄에 따른 LNG발전소 건설은 중복 투자와 공급 과잉 문제로 이어질 뿐이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신규 LNG발전의 필수운전 발전기 필요 역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LNG발전소 연료를 화석연

료인 LNG에서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희망고문에 가깝다. 현재 기술적으로나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고, 도내에서 발전소를 가동할 만큼 충분한 수소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더욱이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린수소는 발전용보다 산업용이나 운송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장하지만, 사업자 스스로는 제주 전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고백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탄소 없는 섬, 제주가 그 길을 열어야 한다.

열린마당

안전한 설, 화재예방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김영길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제주도 화재 발생 40건 중 주거시설에서 8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은 부주의이다. 설 연휴에는 음식 조리, 전열기 사용 증가,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 준비 과정에서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조리 중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사용 후 가스밸브와 전원 차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겨울철엔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도 증가한다. 전열기 구는 반드시 K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이불이나 옷가지 등 가연물과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와 메모리폼 같은 열을 축적하는 침구류는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고향 방문 등으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가스 중간밸브 잠금, 전기 차단기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 화재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작동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뉴스-in

'미식 관광' 관심 속 바가지 대책 씁쓸

도, 축제 평가 기준 강화

○… 지난해 4월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축제장 바가지요금 논란 해소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는 등 제주 관

광 이미지 훼손 우려에 제주도가 관련 논란을 빚는 축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

4일 제주도는 지정 축제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바가지요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축제에 대해선 행사 보조율을 낮추는 등 예산 지원 제한을 추진한다고 발표.

일각에서는 K푸드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주에서도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살린 미식 관광을 활성화 해야 할 시기에 바가지요금 대책을 세워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반응.

만감류 소비 접점 확대 속도

○…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주요 유통업체와의 협업 판촉행사를 추진하며 제주산 만감류와 소비자의 접점 확대에 속도.

4일 제주조공법인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에서 진행한 '만감류 골라담기 행사'를 통해 당초 계획 물량 대비 두 배 수준에 해당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제주조공법인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판촉을 이어가고, 전국 500여 개소의 종·대형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흠크링, 온라인 등 채널별 판촉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며 총 2000t 규모의 만감류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 오은지기자

사설

먹거리 물가 '들썩'… 설 앞둬 집중 관리해야

제주지역 전체 물가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라 체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전체 물가 상승률을 주도했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0.7%까지 낮아지며 전반적인 물가 흐름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상승률도 2.6%로 5개월 만에 2%대로 내렸다. 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폭이 전월 2.5%에서 1.6%로 둔화된 영향이 컸다. 그러나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식품물 가는 두 달 연속 3.0% 상승하며 체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산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두 달 연속 9.6% 상승했던 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12.1%까지 치솟았다. 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축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농산물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쌀 등 곡물류와 상추, 오이 등 일부 채소류가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가 안정세이지만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는 먹거리다. 먹거리 물가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도민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소비자 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액셀리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다. 농축수산물과 설 명절을 앞둬 먹거리 물가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

도의회 다양성·비례성 확대 방안을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오는 20일부터는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는 도의원 선거는 여태껏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경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때마다 늦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번도 다르지 않다.

의회를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수사에 그치지 않으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소수 정당의 설자리가 좁은 탓에 이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외면받아온 사례도 있다. 경개특위에서 지방의회의 다양성, 대표성 등을 강화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끌 장치가 마련되길 바라는 이유다.

현법재판소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한 결정을 내렸다. 극소수의 지지만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진출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다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현재 판단 이후 제주 정가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봉쇄 조항'이 국회보다 더 심각하다는 성명을 냈다. 지방의회는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서다.

6·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이름에 맞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 782-3644 010-4690-3636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례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호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 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온·교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치공사
- ▶ CCTV 및 공청 설치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치공사
- ▶ 전관방송 설치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